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8/ 21 통권 168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세계를 향한 을(乙)의 리더십
- 채권과 채무의 조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 위메프티론 추가 대응방안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승계사업과 기존 사업간의 내부용역거래 대가는 독립된 통상 거래가액을 적용함(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주고받는 각종 무상수증재산의 소득세·증여세 과세여부>

| 개념구분 | 과세·비과세적용 + 관련규정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35조) | 과세되는 예외, 초과액 등 |
|---------------|---|-----------------------------|
| 경제활동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 | 별도 비과세 소액 열거 |
| 우리사주조합 | 소액주주기준 주식의 시가 - 취득가와 의 차액 | 소액주주 아니면 증여세 |
| 사내근로 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의 단체가 해당 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 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 안되면 증여세 과세 |
| 피부양자 생활비 | 생활공유직계가족들간의 일상적 생활비 | 생활비 초과예금, 주택기금 등은 증여세 과세 |
| 피부양자 교육비 | 생활공유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교육실비 | 교육비 초과액은 증여과세 |
| 피부양자 치료비 | 생활공유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치료실비 | 치료비 초과액은 증여과세 |
| 학자금, 장학금 | 사회통념상 학자금, 장학금(학업수행자금) | 학비과잉초과액은 증여과세 |
| 축하금, 부의금 | 사회통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사회통념초과액은 증여 |
| 혼수용품 등 | 결혼에 필요한 일상 가사용품 등 | 호화, 사치품, 주택, 차량은 증여 |
| 불우이웃 돕기 금액 | 불우이웃돕기 +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임의지원고액은 증여 |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89호 / 주간 34호

2024. 8. 21.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 주고받는 각종 무상수증재산의 소득세·증여세 과세여부 | 표지 |
| CEO의 경영산책 | 세계를 향한 을(乙)의 리더십 | 2 |
|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 전기요금 납부 문의드립니다 - 퇴직 총당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매도 가능증권 공정가치평가 - 회생채권 출자전환 문의 | 5 6 |
| 눈에맞는 절세미인 | 채권과 채무의 조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 7 |
| 매일 절세재무요점 | - 가상자산 과세 개요 - 기업투자 환경개선 및 연구인력을 위한 R&D 세제지원 건의 | 9 10 |
| 직장인Survival | 습관을 바꾸는 10대 명언 | 11 |
|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예,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1410, 2024.02.22) -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산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사전법규법인-807, 2023.12.13) | 12 13 |
| 세정뉴스와해설 | 중견련, 기재부에 상속·증여세율 50→30%파격인하요구 | 14 |
| 마케팅 Tax consulting | 승계사업과 기존 사업간의 내부용역거래 대가는 독립된 통상 거래가액을 적용함 | 13 |
| 세무정보 | -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 위메프티몬 추가 대응방안 | 15 26 39 |
| 세무환율정보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4 |

세계를 향한 을(乙)의 리더십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2024년 파리올림픽은 한국 국민에게 ‘파리의 기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21개 종목에서 출전한 테극전사들은 금메달 13개를 따냈다(‘겁 없는’ Z세대의 반전 올림픽 ... 팀 코리아 금빛 세대 교체, 매일경제, 2024. 8. 12).

특히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의 대업을 달성했다. 압도적 세계 1위 대한민국 양궁을 만들어낸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다. 대표팀에 뽑히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어려운 일로 정평이 나 있다. 선수 개개인은 6개월간 총 5차례에 걸친 선발전에서 활 4000발을 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대회가 열리는 해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느냐가 유일한 선발 기준이다. 경력은 물론이고 학연과 지연, 협회 고위직과의 친소관계 따위는 발을 붙일 수 없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으니 메달리스트조차 안일해질 수 없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들도 희망을 가지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회 임박까지 격렬하게 이어지는 ‘투명한 선발전’을 고수했고, 그 덕분에 아무 잡음 없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모두가 수긍하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인맥 아닌 공정 ... 그 뻔한 성공 방정식, 중앙일보, 2024. 8. 1)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대한양궁협회이고, 그 뒤엔 양궁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있다.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2005년 양궁협회장에 취임한 정 회장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다. ‘협회 운영은 투명하게, 선수 선발은 공정하게 해달라’는 원칙만 주문할 뿐이다. 경기장까지 동선을 직접 걸어보며 체크해 숙소를 정한다든지, 보양 특식을 공수한다든지, 전용 숙소와 전용 훈련장을 따로 마련하는 식의,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화도 많다. 통 크먼서도 세심하고, 솔선하지만 나서지 않는 그의 ‘을(乙)의 리더십’은 경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정 회장은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물어가는 것 같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다”며 “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했다(40년 왕좌와 40년 굴욕, 매일경제. 2024.8.2).

한국 양궁은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 대표 선수를 선발한다. 국가대표 선발전과 평가전을 모두 통과해야 올림픽에 나설 최종 3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한 안산, 강채영, 장민희 등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파리에 올 수 없었다. 혼성전 우승을 차지한 후 일본 기자가 한국 양궁이 강한 이유를 물었는데 김우진은 “한국 양궁은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실업까지 모든 선수가 운동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정한 대한양궁 협회가 있기에 모든 선수가 부정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라고 명료하게 말했다.

이 시스템을 확립한 인물이 바로 협회 정의선 회장이다. 정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를 표방하며 한국 양궁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대한양궁 협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양궁이 스포츠를 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성원마다 정 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한국 양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할 수 있다. 김우진은 “정의선 회장님께서 양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하신다. 늘 어떻게 해야 정상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해 고민하고 만들어가신다. 그 덕분에 한국 양궁은 지속해서 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창훈 감독도 “협회와 정의선 회장님이 진짜 세밀하게 선수들에게 지원해주신다. 그런 것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정 회장의 지원이 한국 양궁을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님 덕분에” 절대 빠지지 않는 그 이름…다시 한번 증명한 한국 양궁의 코어, 스포츠서울, 2024. 8. 4.)

정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도 양궁 경기가 열리는 레쟁발리드를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힘을 보탤다. 회장은 주로 육만 먹는 한국 체육계에서 정 회장은 전무후무하게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리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스포츠계는 한국 양궁의 ‘장기 집권’ 배경으로 40년째 양궁협회를 돕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별화된 지원’을 꼽는다. 거액을 쾌척하는 것으로 끝내는 일부 기업과 달리 선수 및 코치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안을 찾아 끝까지 지원하는 방식이어서다. ‘심박수 관리’가 메달 색깔을 바꾸는 핵심 변수란 것을 파악한 뒤 얼굴 색상 변화를 카메라로 포착해 심박수를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준 게 대표적인 예다. ‘공정성과 투명성만 볼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현대차그룹의 지원 원칙도 한국 양궁을 단단하게 한 비결이다. 덕분에 양궁계에서는 파벌 싸움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 불공정한 선수 발탁 문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눈앞의 올림픽에만 매달리지 않고, 학교 체육수업에 양궁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저변 확대에 나선 것도 현대차의 남다른 지원 방식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충북 진천 선수촌에 프랑스 파리의 양궁 경기장인 앙발리드 양궁장과 똑같은 시설을 조성해준 게 대표적인 예다. 양궁이 당일 컨디션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멘탈 스포츠’라는 점을 감안해 선수들이 미리 경기장 특성을 몸에 익히며 체계적으로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멘탈 관리를 위해 스포츠심리 전문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파리올림픽에 동행시켰다.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기술 역량을 총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차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개발기간 1년을 들여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따로 만들었다. 양궁장의 바람을 읽고 스스로 활을 쏘는 로봇이다. 현대차가 만든 슈팅로봇은 10점 만점에 평균 9.65점을 쏘 정도로 고수다. 만약 대표팀 선수들이 실전과 같은 맹훈련을 하고 싶다면 슈팅로봇을 상대하면 된다. 현대차가 개발한 첨단원단을 적용한 ‘복사 냉각모자’를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해당 모자는 직사광선의 반사를 극대화해 주변 환경에 비해 온도를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대차 글로벌전략사업본부 팀장은 “비용보다 오직 선수들의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훈련도구를 제작한다”고 말했다(보양식 대접부터 원정 응원까지..선수들 아버지같이 챙겨, 동아일보, 2024.8. 10.). 지원 대상을 ‘메달권 선수’에게만 국한하지 않는 것도 현대차의 차별화된 후원 정책이다. 국내 최대 규모 양궁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신설했고, 이와 동시에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 대회를 창설했다. 학교 체육 수업에 양궁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일부 지역 중학교에서 시작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체육 수업에서 양궁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여자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의 위업을 이룬 한국 양궁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쟁력 저하로 몸살을 앓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귀감으로 삼을 모범사례이다. 철저한 공정 경쟁을 통한 선수의 선발전칙, 양궁협회 회장사인 현대차그룹의 후원이 빛을 발한 결과이다(소수 정예로 최상의 성과를 거둔 파리 올림픽, 중앙일보, 2024. 8. 10.).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 | | | | | |
|--|---|----|-------|--------------|---------------|---------------|---------------|
| 통 화 명 | | | | 8월 9일 (금) | 8월 12일 (월) | 8월 13일 (화) | 8월 14일 (수) |
| 미 | 달 | 러 | (USD) | 1377.70 | 1369.40 | 1367.70 | 1370.30 |
| 일 | 본 | 엔 | (JPY) | 934.32 | 931.09 | 929.08 | 933.38 |
| 영 | 국 | 파운 | (GBP) | 1755.81 | 1746.33 | 1746.21 | 1763.10 |
| 캐 | 나 | 다달 | (CAD) | 1002.84 | 996.91 | 995.34 | 999.74 |
| 홍 | 콩 | 달 | (HKD) | 176.76 | 175.61 | 175.52 | 175.93 |
| 중 | 국 | 원 | (CNH) | 191.95 | 191.20 | 190.39 | 190.80 |
| 유 | 로 | 화 | (EUR) | 1504.24 | 1494.63 | 1495.24 | 1506.99 |
| 호 | 주 | 달 | (AUD) | 907.63 | 900.31 | 900.97 | 909.33 |
| 싱 | 가 | 폴 | (SGD) | 1038.99 | 1034.13 | 1032.77 | 1040.47 |
| 말 | 레 | 이 | (MYR) | 307.87 | 309.64 | 306.93 | 307.90 |

전기요금 납부 문의드립니다

Q 우리연구원과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TP와 공동으로 외부 부지에 연구시설을 짓고 (대전 TP에서 부지제공 및 건설비 지원) 실질적인 연구시설 가동이나 운영은 우리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설립 초기인 현 시점에서는 전기요금이 한전으로부터 대전TP앞으로 고지서(전자세금계산서 역할 포함)가 발부된 상태인데, 돈은 우리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한전으로부터 직접 우리 연구원 명의로 고지서가 나올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때, 대전TP 앞으로 발행된 고지서를 갖고 우리 연구원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해도 문제는 없을지요?

납부할 예산은 경상운영비로서 법인세 산출 시 비영리법인의 구분손익계산에 의해 수익사업 매출액비율로 공통손금을 계산하여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공제처리할 대상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A 공동매입의 성격이므로 대전TP가 자신들에게 발급된 고지서의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귀사에게 발급하시고 귀사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 총당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퇴직 총당금 계산할 때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매달 회계 처리시 직원들의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 총당금을 계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퇴직 총당금 대상자는 2023년도 입사자 1월 2일부터를 포함하여 2025년 1월 1일까지 근속일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아직 1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2024년 입사자 (2024년 1월 2일)를 포함하여 매달 퇴직총당금 비용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 계산하는데 참고할 만한 법령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A 귀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금지급대상자에 해당되면 회계기준 등에 따라 퇴직급여총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평가

Q 회사에서 지분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되었는데요 (비상장회사)
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결산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1. 공정가치평가를 어떤식으로 하는지요?(비상장업체임)
2.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자본계정??)

A 1.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란 시장가격을 의미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으로 반영합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문의

Q 회생채권 출자전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액면가 5,000원, 10만주 출자전환 주식으로 입고
(증권계좌 잔고 내역에는 매입총액 5억원, 평가총액 3억원, 평가손익 -2억원으로 표시됨)

1. 장부계상시 매도가능증권 5억원 계상 후 평가손실 2억원도 함께 계상하는게 맞을지 또는 막
바로 평가총액인 3억원으로 계상하면 될런지 여부
2. 3.16:1의 비율로 감자시 해당 비율로 매도가능증권 감액을 시키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A 1. 출자전환이 이행되면 출자전환채권을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로 반영하면 되는데, 출자전환에 따
라 입고되는 주식의 가액이 5억이라면 5억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감자시 감자대가와 매도가능증권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채권과 채무의 조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많은 기업들을 이익급감이나 부도·파산 등의 경영위기로 빠뜨리고, 해당 기업들의 채무변제능력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업간에 채권·채무조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채권·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 당장 청산되기보다는 회생하는 것이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채무조정 중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과 채무면제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나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제되는 채무의 장부가액과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며,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 채무자의 회계처리

채무자 A는 차입금 1,000에 대해 토지(장부가:700, 시가:80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탕감받기로 함.

| | | | |
|--------|-------|--------|-----|
| 차) 차입금 | 1,000 | 대) 토지 | 700 |
| | | 자산처분손익 | 100 |
| | | 채무조정이익 | 200 |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받은 경우 동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가액을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채무자의 회계처리

채권자 B는 대여금 1,000에 대해 토지(장부가:700, 시가:80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탕감해주기로 함(B의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

| | | | |
|-------|-----|--------|-------|
| 차) 토지 | 800 | 대) 대여금 | 1,000 |
| 대손충당금 | 100 | | |
| 대손상각비 | 100 | | |

채무면제 등 조건변경에 따른 채권·채무조정

채무자는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채무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 채무면제에 따른 채무자의 회계처리

| | | | |
|--------|-------|-----------|-------|
| 차) 차입금 | 1,000 | 대) 채무면제이익 | 1,000 |
|--------|-------|-----------|-------|

채권자는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채권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계산하며 그 차이금액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조정한다. 따라서 채권의 전체금액을 면제해주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충당금잔액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조정 반영한다.

◇ 채무면제시 채권자의 회계처리(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충당금과 우선상계)

| | | | |
|----------|-------|--------|-------|
| 차) 대손충당금 | 1,000 | 대) 대여금 | 1,000 |
|----------|-------|--------|-------|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가상자산 과세 개요

| | |
|------|---|
| 대상 | 가상자산 양도(매매, 교환)·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시행 | 2025년 1월 1일 |
| 세액계산 | 총수입 - 필요경비(거래수수료, 세무비용 등) - 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세금신고 | 연간 손익 통산 후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

*국세청



반도체 지원안 비교

| 구분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정부 |
|-----------|------------------------------------|------------------------------------|--------|
| 세액공제 기간 | 10년 연장 | 10년 연장 | 3년 연장 |
| 세액공제율 | 시설투자 10%P 일괄 인상, R&D 최대 10%P 인상 | 시설투자 10%P 일괄 인상, R&D 최대 10%P 인상 | 재도입 없음 |
| 조직 | 산업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 |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 없음 |
| 임시투자 세액공제 | 2026년까지 도입 | 재도입 없음 | 재도입 없음 |



기업투자 환경개선 및 연구인력을 위한 R&D 세제지원 건의

| 구분 | 건의안 |
|---------------|--|
| 기업R&D 투자확대 | 대·중소기업 및 국제 공동·위탁연구 30% 특별세액공제 도입 |
| | R&D투자 증가분의 2~10%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세액공제' 도입 |
|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확대(3년 → 6년) |
| 연구인력 사기진작 | 연구인력 소득세 비과세 2배 확대(250만원 → 480만원) |
| | 연구인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700만원 → 1000만원) |
|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10년간 면제 |
| | 중소기업 박사연구원에 대한 2000만원 특별소득공제 도입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혼·출산·양육 지원 세제개편안

| 결혼세액공제 신설 |
|--|
| ▶ 혼인신고 시 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부부 1인당 5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 ▶ 세대주 외 배우자 추가 |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납입액(300만원 한도) 40% 공제 |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 ▶ 각각 1주택 보유 남녀 혼인시 |
| ▶ 양도세 및 증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5년 → 10년 확대 |
|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
|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최대 80% 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확대 |
| ▶ 공제금액 10만원 상향 |
| 첫째 15만 → 25만 / 둘째 20만 → 30만 / 셋째 30만 → 40만 |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 •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
| (2024년은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

※ 기획재정부



습관을 바꾸는 10대 명언

1. 습관을 조심하라.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 마가렛 대처
2.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 도스토옙스키
3.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녀라. - G. 허버트
4.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 - 시오도 루빈
5. 습관은 나무껍질에 새겨놓은 글자 같아서 그 나무가 자라남에 따라 확대된다. - 새뮤얼 스마일스
6. 우유부단한 것만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 윌리엄 제임스
7.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은 성장할수록 달라진다. - 논어
8. 효율적인 경영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저마다 다른 재능과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 재능과 성격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 피터 드러커
9. 습관이 만약 강력한 반박에 부딪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 아우구스티누스
10. 매년 한 가지씩 나쁜 습관을 뽑아버린다면 극악한 인간도 이룩고 선량한 인간이 될 수 있다.
- 벤저민 프랭클린

최 신 판 례 예 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1410, 2024.02.22

Ⅰ 질 의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동업기업의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Ⅰ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5564, 2024.02.29

Ⅰ 질 의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8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자 함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2년 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약 **.*억원임
 - 중간정산액 중 **.*억원은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사의 가지급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 질의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로 구성

질의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후, 주택취득 후 남은 금액으로 가지급금 상환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Ⅰ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 2. 14.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승계사업과 기존 사업간의 내부용역거래 대가는
독립된 통상 거래가액을 적용함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
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
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사전법규법인-807, 2023.12.13

Ⅰ 질 의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 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1안)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2안) 해당 지점*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된 지점

Ⅰ 회 신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하 ‘승계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경리하는 경우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서면법규법인-5223, 2023.12.26

Ⅰ 질 의

- 분할 전 분할법인이 투자한 건설중인자산을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쟁점자산의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성장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Ⅰ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시설")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투자 중인 시설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후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투자 중인 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 같은법 같은조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중견련, 기재부에 상속·증여세율 50→30% 파격 인하 요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증여세율 추가 인하 등 12개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폭적인 상속세 감세를 요구했다.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기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을 요구했다.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할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할 것에 대해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는 확대되는 기업(373개)의 6.4배라고 주장했다.

전체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별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에게 세금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중견련 요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세청, '티메프' 해외직구 피해 속출... "위법 사항 조사 착수"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를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직구)한 고객이 제품을 배송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자 관세청이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9일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들 판매자가 미배송 통관 물품을 국내 재판매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어서 세금과 각종 수입허가 사항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건 관세법 위반이라고 밝힌 후,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주 실수하는 대주주 양도세 사례...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특특' 꼭 확인하세요

A씨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상장사 대주주가 아니라고 보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령에는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 보유요건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산세 포함 2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및 생소한 양도소득 계산법,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도 안내한다.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 국세청, 2024. 8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8.1. ~ 9.2.)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하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I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내용 I

| 번호 | 구 분 | 제 목 |
|----|--------------------|---|
| 1 |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등) | ▶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 2 | |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 3 | | ▶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
| 4 | | ▶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 |
| 5 | 손익통산 |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
| 6 | | ▶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
| 7 | | ▶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



| | | |
|----|----|---|
| 8 | 세율 | ▶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된 사례 |
| 9 | |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10 | | ▶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11 | | ▶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12 | | ▶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 ~ 45%) 미적용 사례 |

□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금년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I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I

| 구 분 | 코스피 | | 코스닥 | | 코넥스 | |
|------------|-----|------|-----|------|-----|------|
|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 '24.1.1.이후 | 1% | 50억원 | 2% | 50억원 | 4% | 50억원 |
| '24.1.1.이전 | 1% | 10억원 | 2% | 10억원 | 4% | 10억원 |

I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구분 I

|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비 고 |
|------|------|------|-----------------------------------|
| 국내주식 | ○ |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손익통산은 확정신고시만 가능 |
| 국외주식 | × | ○ | |
| 파생상품 | × | ○ | |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로 마련된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I 과세대상(대주주 판단 등)

1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K상장주식(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정

● 실수

K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 과세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여전히 K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확인됨에 따라 20%세율을 적용하여

▶ 양도소득세 26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사례설명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Check Point!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K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나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당해연도에 새롭게 매수한 K상장주식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정



● 실수

K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 과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A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30%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 양도소득세 39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사례설명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K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상장주식을 당해연도에 전부 매각한 후 새롭게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주식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

Check Point!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

3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이후 K상장주식의 양도시점에는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 실수

K상장주식의 양도 시점에 소액주주(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 과세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지분을 포함할 경우 과세대상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20%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 양도소득세 26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사례설명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지분을 및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

Check Point!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

4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 실수사례

○○은 K상장주식(중소기업이 아님)을 장외 거래한 후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주식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정

● 실수

K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 과세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20% 세율을 적용하여

▶ 양도소득세 26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사례설명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

Check Point!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



5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K상장법인(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로 K상장주식을 장내매도하여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 해당)을 장내 매도하여 5천만원 손실이 발생. 예정신고시 K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5천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 실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K상장주식의 양도차익 1억원과 과세대상이 아닌 B상장주식의 양도차손 5천만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5천만원, 양도소득세(세율 20% 적용) 1천만원 신고·납부

● 과세

과세대상이 아닌 B상장주식의 양도차손 5천만원에 대한 손익통산을 부인하여

▶ 양도소득세 26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사례설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

Check Point!

①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

6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K국내주식(비상장, 중소기업이 아님)과 B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3년 상반기에 양도하고, 국내주식은 양도차익(1억원)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5천만원)이 발생하자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8월에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 실수

국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을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양도소득 과세 표준 5천만원, 양도소득세(세율 20% 적용) 1천만원 신고·납부

● 과세

국외주식의 양도차손 5천만원에 대한 손익통산을 부인하여

▶ 양도소득세 12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확정신고시 통산하여 정산□환급 가능

■ 사례설명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양도차손을 예정신고시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

Check Point!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7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세율이 낮은 주식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 실수

○○씨는 2024년 A주식 양도로 1억원 양도차손(적용세율 10%), B주식 양도로 1억원 양도차익(적용세율 10%), C주식 양도로 2억원 양도차익(적용세율 20%)이 발생. ○○씨는 A주식 양도차손을 적용세율이 가장 높은 C주식의 양도차익부터 통산하여 B주식 양도소득 1억원 C주식 양도소득 1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 주식 | 합계 | A주식 | B주식 | C주식 |
|---------|-----|------|-----|------|
| 세율 | 0 | 10% | 10% | 20% |
| 통산 전 소득 | 200 | △100 | 100 | 200 |
| 손익통산 | | | | △100 |
| 통산 후 소득 | 200 | 0 | 100 | 100 |
| 양도소득세 | 30 | 0 | 10 | 20 |



● 과세

A주식의 양도차손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B주식 양도차익에서 먼저 통산함에 따라

▶ 양도소득세 12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

| 양도 주식 | 합계 | A주식 | B주식 | C주식 |
|---------|-----|------|------|-----|
| 세율 | | 10% | 10% | 20% |
| 통산 전 소득 | 200 | △100 | 100 | 200 |
| 손익통산 | | | △100 | |
| 통산 후 소득 | 200 | 0 | 0 | 200 |
| 양도소득세 | 40 | 0 | 0 | 40 |

■ 사례설명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양도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통산

Check Point!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 손익통산의 순서를 유의

8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신고하여 가산세 등 추정

● 실수

'24년 상반기 K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율 20%)하고, '24년 하반기 B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각각 이행하였으나, 확정신고 미이행

● 과세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세율(25%)이 적용됨에 따라

▶ 양도소득세 6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사례설명

상·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각각 이행한 경우로서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하반기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3억원 초과 2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Check Point!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 및 누진세율 적용 확인

9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정

● 실수

비상장 K주식(중소기업이 아님)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 양도소득세(세율 10% 적용) 1천만원 신고·납부

● 과세

K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20%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 양도소득세 12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사례설명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됨.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 적용

Check Point!

신고 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율을 적용



10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 실수

중소기업 비상장 K주식을 양도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 과세 표준 1억원, 양도소득세(세율 10% 적용) 1천만원 신고·납부

● 과세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 양도소득세 12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사례설명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

Check Point!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11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K상장주식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K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 실수

중소기업이 아닌 K상장법인 대주주가 K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 양도소득세(세율 20% 적용) 2천만원 신고·납부

● 과세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로 확인되어 30%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 양도소득세 12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사례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 적용

Check Point!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

12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 K특정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중소기업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함에 따라 가산세 등 추징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

● 실수

K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 양도소득세(세율 10% 적용) 1천만원 신고·납부

● 과세

K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누진세율(35%)이 적용됨에 따라

▶ 양도소득세 11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

■ 사례설명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Check Point!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 국세청, 2024. 8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
| 설비투자 지원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5%, 0.3% 0.5%, 세액공제(\$7의4)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0%(중소 20%)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10%(중소 20%)추가공제(\$29의4)(\$29의4)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것에 한함) 그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19) |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30의3)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5.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8의3) |
|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40%)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중소25%, 중견 8%) + 국가전략기술 최대 40%(중소50%)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중소 50%) 세액공제(\$10)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
|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
| M&A 활성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
|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설투자 금액의 1%, 3%, 10% 기본공제1)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2) 추가공제(\$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성장 · 원천기술 2% 우대, 국가전략기술 5 ~ 6% 우대 2) 국가전략기술 1% 우대 '21년에는 아래의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③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
|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63)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 ◦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
|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
|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



| | |
|---------------------------------|---|
| 감면 |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
|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4.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3) |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 ◦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9) |

● 법인세법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

●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 7)
 -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 소기업 판정기준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 · 임 · 어 · 광업, 건설 ·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감면내용

| 업종구분 | 중기업 | | 소기업 | |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수도권 | 수도권 밖 |
| 도소매/의료업 | - | 5 | 10 | 10 |
| 기타업종 | - | 15 | 20 | 30 |
|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 - | 7.5 | 10 | 15 |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감면 한도 : 1억원

-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 업종구분 | 중기업 | | 소기업 | |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수도권 | 수도권 밖 |
| 알뜰주유소 | 10 | 15 | 20 | 20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5⑩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 내용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

| 창업중소기업 | | | | | | 창업벤처 중소기업 |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 | | |
| 청년창업 ¹⁾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³⁾ | 그 외 | 청년창업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³⁾ | 그 외 | | | |
| 5년 100% ²⁾ | 5년 100%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1)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 (2)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3)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19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19) 10명 → ('20) 15명 → ('21) 20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 $[50\% \times (15-10)/10]$ = 총 75% 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 $[50\% \times (20-15)/15]$ = 총 66.7% 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1) 8명 → ('22) 16명]
 - ('21 과세연도) 50% 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 $(60\% \times 1/2)$ = 총 80% 감면
-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내용

| | |
|------|--|
| 중소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 (1) + (2) + (3) (1) 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10%)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 4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10%) (3) 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①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②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13개 분야 272개 기술(조특령 별표7)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7개 분야 62개 기술(조특령 별표7의2) |
| 일반기업 | <p>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1) + (2) +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Min(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1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 + Min(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15%)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10%) (3) 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①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25%(중견 40%) ②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2%(중견 8%) * 기본 0%+(매출액 대비 R&D 비중 ×1/2, 최대 2%) |

- 세액공제대상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 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
 -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만원)

| 구 분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대기업 |
|--------------------|-------|-------|------|-----|
| | 수도권 | 지방 | | |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 1,100 | 1,200 | 800 | 400 |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 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②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통합고용세액공제(§ 29의8)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종 전 | | | | | 현 행 | | | | |
|---|--|--------------|-------|------------|--|--|--------------|-------|------------|
|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 | |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 | | |
| 구 분 | | 공제액 (단위: 만원) | | | 구 분 | | 공제액 (단위: 만원) | | |
| | | 중소(3년) | | 중견 (3년) | | | 중소 (3년) | | 중견 (3년) |
| | | 수도권 | 지방 | | | | 수도권 | 지방 | |
| 상시근로자 | | 700 | 770 | 450 | 상시근로자 | | 850 | 950 | 450 |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 | 1,100 | 1,200 | 8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 성 등 | | 1,450 | 1,550 | 800 |
| | | | | 400 | | | | | 400 |
|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범위(①, ②): 15~29세 | | | | | * 청년 범위: 15~34세 | | | | |
|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 (중소 30%, 중견 15%) | | | | |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추가공제 -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포함 | | | | |
|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 | | | | | | | | |



| 구 분 | 공제액 (단위:만원) | |
|---|-------------------------------------|-----|
| | 중소 | 중견 |
|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 900 |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

| 구 분 | | | |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 | 통합고용 세액공제 ¹⁾ (조특법§29의8) |
|----------|-----------------|-----|-----|---|---------------------------------------|
| 적용대상 | | | |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
| 공제요건 | | | |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 |
| 기본 공제 | 그외 상시 | 중소 | 수도권 | 700만원 | 850만원 |
| | | | 지방 | 770만원 | 950만원 |
| | | | 중견 | 450만원 | |
| | 청년, 장애인, 60세 | 중소 | 수도권 | 1,100만원 | 1,450만원 |
| | | | 지방 | 1,200만원(1,300만원 ²⁾) | 1,550만원 |
| | | 중견 | | 800만원(지방은 900만원 ²⁾) | |
| | | 대기업 | | 400만원(지방은 500만원 ²⁾) | |
| | 경력단절여성 | 중소 | 수도권 | - | 1,450만원 |
| | | | 지방 | - | 1,550만원 |
| | | 중견 | | - | 800만원 |
| | | 대기업 | | - | 400만원 |
| 추가 | 정규직, 육아휴직 | 중소 | - | 1,300만원 | |
| | | 중견 | - | 900만원 | |
| 청년나이 | | | | 15~29세 | 15~34세 |
| 사후관리 | | | | • (기본공제)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년(대기업 1년) 추가공제 • (추가공제) 전환일 ·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통합고용만 해당) | |

1)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20, '21년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 132)

- 최저한세란?

•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 최저한세율

| 구 분 |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3년 | '14년 이후 |
|------------------|----------------|------|------|------|------|------|---------|
| 중소기업 | | 8% | 8% | 7% | 7% | 7% | 7% |
| 일 반 기 업 |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 신설 | | | 8% | 8% | 8% |
| |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 | | | 9% | 9% | 9% |
| |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3% | 11% | 10% | 10% | 10% | 10% |
| | 과세표준 1천억 이하 | | | 11% | 11% | 12% | 12% |
| | 과세표준 1천억 초과 | 15% | 15% | 14% | 14% | 16% | 17% |

참고 1.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지식기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

-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㉓)

-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참고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6①1호)**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상 생략하였음)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 국세청, 2024. 8

I 위메프·티몬 사태 현황

□ (경과) 7월 중순부터 정산 지연 → 현재 회생절차로 정산 중지

- 7월 중순부터 위메프·티몬은 여행사 등 판매자에게 대금 미정산 → 판매자 계약 일방 취소, 카드사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확산
- 위메프·티몬 기업회생 및 자율구조조정(ARS) 신청(7.29) → 회생법원은 절차진행 위해 자산 동결*(7.30), 자율 구조조정 승인(8.2)
- * 위메프·티몬의 자의적 자산처분 금지(보전처분) 및 채권동결(포괄적금지) 명령(7.30)

□ (피해) 정산지연금 2,783억원(8.1), 소액비중 높으나 추가 피해 우려

-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 금액은 총 2,783억원*(8.1일 기준), 분야별로는 일반상품 79%, 상품권 21% 등 구성
- *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금액이며,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금액은 191억원(8.1일 기준)
- 현재까지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개로 추산, 업체당 미정산금액*의 약 80%가 1천만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다수(8.1, 금감원)
- * 규모별 비중(%) : (1천만원 이하) 80 (1천만원~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10
- ※ 위메프·티몬·인터파크 판매자 분포의 단순합산 기준(중복 포함)
-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보다 확대될 가능성

□ (타 e커머스) 재무건전성, 판매대금 분리 운영 등 모니터링중

- 금번 사태에 따른 e커머스 시장의 거래량 및 판매자 동향 등에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산업부)



- * '24.7월 e커머스 이용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통상 7월이 온라인 유통 비수기인 점 고려시, 쿠폰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는 상황
-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여타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 판매대금 분리운영* 등 지속 모니터링 중
- * G마켓·11번가·네이버 등은 판매대금에 대해 에스크로 정산시스템 운영 중

II

대응경과

□ 사태 발생 후 즉시 관계부처 TF 구축(7.25) 및 현황점검 실시

- 미정산 사태 발생 직후 관계부처 합동 TF*(기재부 1차관, 7.25) 중심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공유 및 대책 협의
- * 기재부 1차관 주재 / 공정위·금융위·금감원·산업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기관 1급
- 위메프·티몬 현장조사*(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 및 금융(금융위)·여행(문체부)·e커머스(산업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 점검
- * 위메프·티몬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여부 점검 등 추진(7.25~7.31)

□ 시장혼란 방지 및 긴급 피해지원 위한 1차 대응방안 발표

- * 위메프·티몬 사태 관계부처 TF 2차 회의(7.29)
- 그간 파악된 피해규모·현황을 기반으로 정산지원 사태에 따른 소비자·판매자 피해 지원방안 등을 담은 1차 대책 발표(7.29)

지원 대상

1차 대책 주요 지원사항

소비자

(취소·환불) 신속한 결제 취소 및 환불처리 지원, 집단분쟁조정 지원

판매자

(금융) 총 5,600억원+α 유동성 공급,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세정)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판로) 위메프·티몬 입점기업의 他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추가 대응방안 +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향 논의

- * 위메프·티몬 사태 관계부처 TF 3차 회의(8.2)
- 신속 지원을 위한 1차 대책 집행상황 점검,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추가 파악된 피해현황 등을 바탕으로 추가 대응방안 협의
- 금번과 같은 정산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 논의

III

1차 대책 신속집행 및 추가 대응방안

- ◇ 1차 대응방안(7.29) 신속 집행과 함께 추가 보완방안 마련
 - (소비자) 금주중 신속히 환불 + 여행·숙박·항공권 분쟁조정 실시
 - (판매자) 8.9일부터 자금지원 신청 개시 + 고용유지 등 지원

1

소비자피해 지원

□ (환불) 일반상품 환불 완료 목표,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

- (일반상품)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 통해 금주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금융위+공정위]
- (상품권·여행)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하여 환불 지원 + 소비자원 분쟁조정 병행[금감원+공정위]
 - 상품권이 정상 사용될 수 있도록 발행사·사용처 협조 요청[금감원+공정위]
- (소액결제)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금액이 원활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PG사·이동통신사에 협조 요청[과기정통부]
- (정보확인) 금감원 점검반을 확대운용하여 환불에 필요한 결제취소 및 미배송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금감원]
- (민원상담) 금감원 및 소비자원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민원상담창구 등 운영하며 환불처리 등 피해구제 지속[금감원+공정위]
 - ※ 8.5일 기준 소비자원·금감원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12,266건 접수

□ (조정·회생)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분쟁조정절차 실시

- (분쟁조정)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금주중



완료(8.1~8.9)하고 조정절차 신속 진행[공정위]

※ 8.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360건 접수

- 기타 분야(일반상품 등)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 해당시 집단분쟁조정 실시[공정위]
- (회생절차) 회생절차 개시될 경우 채권신고 등 참여 지원[공정위]

2 판매자피해 지원

□ (자금지원) 8.9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 필요시 추가 공급 검토

-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2,000억원(소진공1,700, 중진공300), 기업당 한도/금리 소진공1.5억원/3.51%·중진공10억원/3.4% → 8.9일부터 접수* 시작[중기부]
 - * 소진공·중진공 누리집 및 지역본부·센터 신청 → 심사 간소화하여 신속 집행
 -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소진공 자금공급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중기부(소진공)]
 - * (대리)소진공은 대상 판단 + 금융기관이 대출 → (직접)소진공이 대상 판단, 심사, 대출 실행
 - 중진공 자금(300억원, 직접대출)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액방안(지원규모 확대 등) 강구[중기부(중진공)]
- (지자체별 지원) 각 지자체內 피해 판매자에 대해 지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약 6,000억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참고>
- (신보-기은 금융지원) 총 3,000억원,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원*, 금리 3.9~4.5% → 8.9일부터 접수** 시작, 8.14일경 개시(금융위)
 - * 30억원 이상 피해업체는 일반보증 또는 P-CBO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안내
 - ** 신보에서 접수 → 지원대상 등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대출 실행(기은)
 -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고, 피해규모·집행추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확대 검토(금융위)
- (만기연장) 정산지연 기간(5월~)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연장 → 8.7일 시행(금융위+중기부)
 - * 해당 대출·보증기관 창구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속하게 만기 연장
 - 위메프·티몬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 연장 등 지원 → 8.7일 시행(금융위)
 - * 선정산대출 취급은행(SC, 국민, 신한) 창구에서 신청
- (지원체계) 긴급대응반 및 기관별 전담반을 운영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밀착지원** (금융위+중기부)
 - *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 ** 금감원·정책금융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지원프로그램, 향후 채무조정 등 안내

□ (분야별 맞춤지원) 분야별 피해상황 바탕으로 추가지원 강구

- (관광)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지원 지속(8월~)(문체부)
 - *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 금리 △2.5%~△3%p 지원
 - 여행사 등 지원확대 위해 관광기금 용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이차보전 심사기간도 4주→2주로 단축(문체부)
- (농·수산) 피해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추가지원 검토(농식품부+해수부)
 - 「위메프·티몬 사태 수산업 피해 신고센터(수협, 한국수산업)」(해수부), 「위메프·티몬 사태 농업분야 피해 신고센터(농협중앙회)」(농식품부) 운영
- (기술보증) 기보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금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기술기업*에 신규보증 우대지원** (중기부(가보))
 - * 예) 티몬·위메프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담당 IT기업, 부가 금융서비스 제공 핀테크기업 등
 - ** 보증비율 90% 부여, 보증료율 0.3%p 감면 등

□ (애로해소) 판로확보, 고용유지지원 등 판매업체 경영애로 해소

- (판로지원) 8월 중순부터 피해업체 他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중기부)
 - *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큐텐계열사(티몬·위메프 등) 입점소상공인 우선 대상
- (고용유지지원) 피해기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추진 (고용부)
 - *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1일 6.6만원 한도)
 - 관련 임금채불 발생시 대지급금*, 생계비 용자** 등 지원(고용부)
 - *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있을 경우 최대 2,100만원까지 국가가 임금 대신 지급
 - ** 체불근로자에 대해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연 1.5%로 생계비 용자지원

IV 제도개선 방향

- ◇ 최근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 규율·관리체계가 미비
 - * 국내 e커머스업체 43개(매출액 500억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 중 PG 겸영 업체는 9개사(티몬, 위메프, 롯데쇼핑, 인터파크커머스,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카페24)
 - 일부 e커머스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 발생



⇒ 판매자 보호를 위한 e커머스 행위 규제(정산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전자상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추진

①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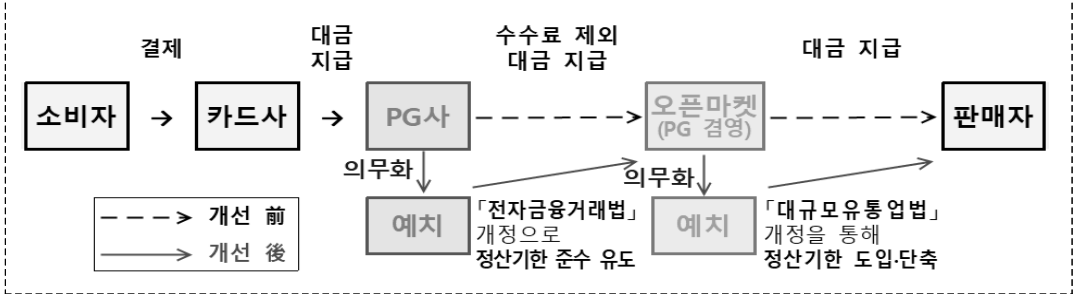
- (현황) e커머스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 PG社는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대금 관리
 -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상 정산기한 규정**
 - *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천m² 이상인 자
 - ** 정산기한 : (특약매입·위탁판매) 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 상품수령일 기준 60일
 - 다만, 일부 e커머스업체들은 마케팅 등 목적으로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정산기한을 짧게 하거나 판매대금을 예치
 - (개선방향) e커머스업체, PG社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계좌 등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 (정산기한) e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규모유통업법)
 - * 온라인 중개업은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 및 비용이 적음
- ※ 구체적 정산기한은 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추후 검토
-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社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내 대금지급 의무화 및 미지급시 제재(전자금융거래법)
 - (대금 별도관리) e커머스업체(대규모유통업법), PG社(전자금융거래법)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
 - ※ 적용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
 -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e커머스업체(대규모유통업법)·PG社(전자금융거래법)의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
 - * 판매대금 유용시 e커머스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PG사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관련 현황 및 개선안>

| 근거법 | 규율 대상 | 정산기한 | 판매대금 별도관리 |
|-------------|--|--------------------------|--------------|
| 대규모 유통업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유통업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직접 판매* * ①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②매장면적 3,000m2 이상 점포 사용 | O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커머스업체추가)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간 거래 중개 | X(→O) ※ 정산기한 신규 도입 | X(→O) |
| 전자 금융거래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G社)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또는 대가의 정산 대행 | X(→O) ※ 정산기한 준수 유도 | X(→O) |

※ 파란색 : 개선

※ 개선 後 e커머스 정산 구조



② PG社 관리·감독 강화

- (현황) PG업에 대한 진입 기준이 낮아 159개의 PG社가 등록되어 있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시 실효적 감독수단도 미비
 - 등록 대상인 PG社에 대해서는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시 경영개선협약 체결만 가능하며, 협약 미이행시 제재근거 부재
- (개선방향) PG社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 마련(전자금융거래법)
 - *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건전하게 영업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 강화 등
 -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社*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외국환거래법)
 - *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거래법령)으로 등록한 PG사로, 국내 소비자와 해외카드 가맹점간 국경간 거래 등에서 결제대행 업무 수행



③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

- (현황)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제3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 구입시 사용하는 각종 페이, 포인트 등
- (개선방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이하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전자금융거래법, 약관법 上 표준약관)
 - (발행관리)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9.15)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
 - * (사용업종) 現2개 이상의 업종 이상에서 사용 → 改사용업종 요건 삭제
(등록면제) 現발행잔액 30억원 미만 → 改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
 -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하여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환급 보장
 - * 선불충전금을 100% 예치·신탁해야 하며, 파산 등의 경우 소비자 우선변제
 - (소비자보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
 - *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 고지의무(제25조의3), 잔액 환급 요건(제19조) 등
 - 현행 「약관법」에 따라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 사용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형벌 부과(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④ 우수 e커머스 인센티브 신설 및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

-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e커머스 기업 및 우수 e커머스 입점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우수 e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대하여 직권조사 면제(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등 인센티브 부여
 - 금융회사의 자금거래시 e커머스 회사 등 거래관련업체의 결제위험도 반영하도록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 실태를 개선(금감원)
-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e커머스와 판매자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 도입 검토(대규모유통업법)
 - * (예시)계약서면 교부·보관 의무,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

◇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 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국회 제출

◇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 논의
- e커머스, 빅테크 등 금융·IT 융합 산업의 경우 혁신적 측면과 관리감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리·감독체계 보완방안 강구

* (예) 금융회사에 준하여 관리감독시 그림자 금융 관리, but 혁신적 성장 저해 우려

V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추진계획

| 조치사항 | 추진시기 | 부처·기관 |
|------|------|-------|
|------|------|-------|

1. 소비자피해 지원

| | | |
|------------------------------|--------|-------------|
| ▶ 피해금액 환불 지원 및 분쟁조정 | 계속 | 금융위·금감원·공정위 |
| ▶ 상품권 정상사용을 위한 발행사·사용처 협조 요청 | 계속 | 금감원·공정위 |
| ▶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 협조 요청 | '24.8~ | 과기정통부 |
| ▶ 금감원 점검반 확대 운용 | '24.8~ | 금감원 |
| ▶ 금감원·소비자원 내 민원 상담창구 운영 | 계속 | 금감원·공정위 |
| ▶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완료 및 절차 진행 | '24.8~ | 공정위 |
| ▶ 회생절차 개시될 경우 채권신고 등 지원 | '24.8~ | 공정위 |

2. 판매자피해 지원

| | | |
|---------------------------|--------|----------|
| ▶ 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 '24.8~ | 중기부 |
| ▶ 신보-기은 금융지원 접수 및 개시 | '24.8~ | 금융위 |
| ▶ 기존 대출·보증 최대 1년 만기 연장 시행 | '24.8~ | 금융위·중기부 |
| ▶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시행 | '24.8~ | 금융위 |
| ▶ 긴급대응반 및 기관별 전담반 운영 | '24.8~ | 금융위·중기부 |
| ▶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지원 | 계속 | 문체부 |
| ▶ 수산업·농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 '24.8~ | 농식품부·해수부 |
| ▶ 기보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 '24.8~ | 중기부·기보 |
| ▶ 피해업체 he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24.8~ | 중기부 |
| ▶ 피해업체 고용지원 | '24.8~ | 고용부 |

3. 제도개선 방향

| | | |
|---|-------|---------|
| ▶ e커머스업체 정산기한 설정 및 제재근거 마련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 | '24.8 | 공정위 |
| ▶ PG사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 및 제재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 '24.8 | 금융위 |
| ▶ e커머스업체 및 PG사 판매대금 별도관리 *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 '24.8 | 공정위·금융위 |



| | | |
|--|--------|-----|
| ▶ PG사 등록요건 강화 및 기준 미충족시 제재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 '24.8 | 금융위 |
| ▶ 외국환업무 취급 PG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등 규제 검토 | '24.8~ | 기재부 |
| ▶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및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도입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 | 9.15일 | 금융위 |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의 「표준약관」 반영 * 「표준약관」 개정 | '24.9 | 공정위 |
| ▶ 우수 e커머스 기업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직권조사 면제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예규)」 개정 | 법 개정 후 | 공정위 |
| ▶ e커머스-판매자간 거래관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 도입 검토 | '24.8~ | 공정위 |

□ 상담창구 안내

| | | | |
|-----------------------|-----------------|-------------------|---------------|
|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 ☎1372 | 금감원 종합지원센터 | ☎1332 |
| 중진공 | ☎1811-3655 | 소진공 | ☎1357 |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기업은행 | ☎1566-2566 |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 수협중앙회(어업인) | ☎02-2240-2251~2 | 한국수산물 가공·유통기업) | ☎02-589-4647 |
| 농협중앙회 | ☎02-2080-5114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